

전문가 코칭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장진호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윤리

윤리 연구소

독일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사례

—

4차 산업혁명의 4대 윤리문제

기업윤리 브리프스

국내 유일의 기업윤리 월간지
2017
06



국민권익위원회

▶ 본 월간지의 저작권은 국민권익위원회에 있습니다.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www.acrc.go.kr ▶ 기업윤리 브리프스

발행일 2017년 6월 1일 (매월발행, 통권54호, 비매품) 발행인 성영훈

발행처 국민권익위원회 구독 신청 044-200-7167

주소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민간협력담당관실



상진호

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
사회학 교수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업윤리

Q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어떠한 기업윤리 문제가 새롭게 등장하는가?

4차 산업혁명은 지능정보사회의 도래와 연관된다.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의 발전이 3차 산업혁명과 연관된 정보사회를 가져왔다면 인공지능, 로봇, 소셜미디어, 클라우드,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모바일, 무인이동수단, 3D프린터, 가상현실, 합성생물학 등과 같은 분야에서의 기술발전이 지능화, 초연결성, 융합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새로운 지능정보사회의 도래를 가능하게 하였다는 진단이다.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흔히 거론되는 대표적 사례는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테슬라 등의 기업이다. 이런 기업들이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마주치게 될 기업윤리의 주요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비스나 제품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안과 관련된 문제들이다. 기업 측에서는 이용자의 정보를 가급적 많이 확보하여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하는 유인이 통상적으로 존재한다. 클라우드, 빅데이터, 인공지능을 활용한 맞춤형 서비스의 부상은 이러한 경향을 강화한다. 하지만 이런 경향 속에서 이용자의 중대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둘째, 기업의 의사결정이나 운영상의 주요 기능에 있어서 점차 인공지능의 활용이 증가하는 가운데 나타나는 윤리적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인공지능이 가치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 데 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다. 하지만 인공지능 역시 인간에 의해 만들어지고 조건화되기에 왜곡될 가능성은 남아있다. 2016년 3월 마이크로소프트는 사람과 대화를 나누며 인간의 언어를 학습하는 인공지능 채팅봇 테이(Tay)를 트위터 등에 선보였다가 16시간 만에 이를 중단시켰다. 악의적 이용자들이 각종 차별발언과 욕설, 자극적인 정치발언 등을 학습시켜 이를 따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위험한 기술이나 논란의 소지가 큰 기술의 통제문제, 신기술로 인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의 새로운 판단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가령 3D프린터 등을 이용하여 개인들이 맞춤형 무기 등을 생산하게 될 수도 있고, 새롭게 만들어진 생명체나 바이러스가 생태계를 교란하거나 무기로 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태아의 유전자를 조작한 맞춤형 아기의 탄생이 가져올 문제도 논란의 대상이다. 자율주행차가 사고를 냈을 때 이는 운전자/관리자의 책임인지 제조회사의 책임인지의 문제 역시 판단이 쉽지 않다.

Q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요한 기업윤리 문제들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첫째, 기업들은 개인정보에 대해 철저한 보안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용자들이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도적으로 검토하고, 기업의 개인정보와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나 보안망의 구축과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다.

둘째, 인공지능과 로봇의 설계 및 활용에 있어서, 인간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윤리적으로 침해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펴야 할 것이다. 인공지능이 가치로서의 윤리라는 측면에서 부적절한 면이 없는지, 특정 로봇이 인간에게 물리적인 위해를 가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맞춤형 제조기술로 인한 위해도구나 무기 등의 제조에 대해 기업차원에서 예방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관련 제품의 설계도나 소재의 활용에 제약을 두는 방법도 가능하다. 생명공학적인 윤리와 관련해서는 기업 차원 이상의 국가적 혹은 국제적인 차원의 규범과 규제가 작동하겠지만 기업 역시 이의 이행 및 자체적 윤리규칙의 마련 등과 관련해 내부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또한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에 기반한 제품으로 인한 사고발생 시, 이용자와 제조기업간 책임소재와 관련해 합리적인 판명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이고 제도적인 대비 또한 필요할 것이다.

변화의 진통

새로운 시대에는 자연스럽게 진통이 따라 붙는다. 이는 과거 산업혁명의 시대에도 그러했고, 4차 산업혁명도 마찬가지이다. 각 산업혁명에 따른 윤리적 리스크와 함께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우리가 맞이하게 될 윤리적 리스크에 대해 살펴보자.

1차 산업혁명 (기계화 시대)

18세기, 증기기관의 발명은 기차라는 이동수단을 발전시켰고 농업 중심이던 사회는 도시의 공장에서 재화를 생산하는 공업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

▶ 노동자와 자본가



도시화로 생겨난 공장의 주인, 자본가는 큰돈을 벌어들이는 반면, 그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임금은 턱없이 적었다. 노동 착취에 대한 제재도 없는 상황에서 자본가에게 노동자는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때문에 성인 남성은 물론, 여성과 아동들까지 노동에 동원되어 과로에 시달려야 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1802년 등장한 '공장법'은 12시간 이상의 노동 및 심야 작업을 금지시킨 것을 시작으로 지속적으로 개정되어 1847년에는 1일 노동시간을 10시간으로 제한하였다.

2차 산업혁명 (자동화 시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로 이어진 2차 산업혁명은 기술혁신의 시대였다. 철강 산업의 발달은 기계화를 더욱 진전시켰고 전기의 보급은 자동화 시대를 열었다.

▶ 기술 혁신의 주체

2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는 다양한 사업의 연계가 필요한 경우가 많았다. 대표적으로 전등을 상업화하기 위해서는 전등 개발 회사, 전력공급사, 발전기 생산 회사, 전선 생산 회사 등 많은 회사가 필요했다. 1889년 에디슨은 이 전

기 산업 관련 회사들을 통합해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Edison General Electric)사(현재의 GE)를 만들었다.

다양한 사업 연계의 필요성으로 인해 2차 산업혁명의 기술혁신은 대기업이 주축이 되었고 이에 따라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대기업에게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책임을 요구하였다

▶ 인간의 부품화



1936년 개봉한 영화 《모던타임즈》는 산업화 시기의 미국을 살아가는 노동자의 삶을 다루고 있다. 2차 산업혁명의 시기에도 노동자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었으며, 기계화 촉진으로 산업재해가 늘어났지만 제대로 된 보상을 받기 어려웠다. 공장주 입장에서 산재로 일하지 못하게 된 노동자에게 돈 몇 푼을 쥐여주고 잘라버리면 그만이었다. 어차피 일할 사람은 많았기 때문이다. 인간을 기계의 한 부품처럼 본 것이다.

3차 산업혁명 (정보화 시대)

20세기 후반, 사람들은 인터넷이라는 사이버 세상과 마주한다. 공간의 제약을 풀어버린 이 세상에서는 지구 반대편 사람과의 실시간 소통이 가능해졌다.

▶ 기회와 위기의 장, SNS

인터넷은 전 세계인을 사이버 세상이란 한 공간에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었다. 특히 전 세계인을 하나의 소통의 장으로 끌어 모은 SNS의 위력은 어마어마했다. SNS 세상의 소비자들은 소비자로서 제품을 평가하고 이것으로 콘텐츠를 만들어 다른 소비자들에게 알렸

다. 소비자들은 기업이 제공하는 광고나 콘텐츠보다 같은 소비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는 기업에게 위기가자 기회로 다가왔다. 기업에게 고객은 강력한 감독관이자 영업사원이 된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지능화 시대)

2016년, 세계경제포럼(WEF)을 통해 세계적 이슈가 된 4차 산업혁명은 온라인 세상의 정보로 오프라인 세상(현실)을 변화시키는 새로운 세상이다.

▶ 정보를 보호하라



온라인 세상이 등장하고 정보는 자산이 되었다. 그리고 그때부터 기업은 그 정보를 노리는 사람들과 전쟁을 벌이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더 많은 개인 정보가 수집·저장되는 만큼 이 전쟁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정보가 많아질수록 정보 유출의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따라서 기업들은 정보유출을 막기 위해 신체 정보를 이용한 비밀번호 등 다양한 기술을 도입하고 끊임없이 검토·개선하고 있다.

산업혁명으로 발생한 노동문제와 환경문제, 그리고 고객과 사회의 엄격한 요구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는 보안과 인권의 문제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하지만 기업이 모든 문제에 완벽한 답을 찾는 것은 무리이다. 대신 기업이 할 일은 이해관계자들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납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 계속 변화해나가는 것이다.

독일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사례



세계 각국은 국가차원에서 친환경 경영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전략으로 추진하고 있다. 독일도 예외 없이 연방정부 차원에서 2010년 10월부터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CSR 액션 플랜」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다. 독일의 바이엘이나 포드 스포츠와 같은 기업은 국가적인 사회적 책임 프로그램을 적극 실천하고 있고, 그 일환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 프로그램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 정부의 친환경 정책과 민간 기업의 경영 실천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연립정부를 구성한 적도 있을 만큼 환경 우선의 정책이 국정과제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독일 연방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확대를 위해 도입한 「CSR 액션 플랜」도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학교나 시민의 사회적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동시에 기업의 신용 및 투명성을 제고시키고자 한다. 특히 독일 제품의 품질 인증프로그램의 일환으로 「CSR-Made in Germany」를 부각시켜 독일 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친환경적 제품을 생산하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관리한다.

독일의 환경보호를 위한 경영은 독일의 대다수 기업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약 94.3%가 CSR 활동 및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예컨대 M+W 그룹, 독일 철도, EWE, Otto 그룹, 퓨마, Xella 등 대기업은 2011년부터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하여 「기후보전을 위한 재단」을 설립·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정부 역시 2010년부터 CSR과 친환경 경영에 모범이 되는 기업에게 매년 「독일 CSR」상을 수여하고 있다.

▶ 독일의 친환경 경영의 모범적 사례

기업 스스로가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독일의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바이엘과 포드 스포츠를 꼽을 수 있다.

글로벌 화학 및 의약품 생산업체인 바이엘은 「보다 나은 삶을 위한 과학」이란 기업 이념을 캐치프레이즈로 사용하면서 10대 윤리강령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 경영으로 「바이엘 기후변화 대응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으며, 생산 공정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감소를 위해 기업 자체 온실가스 방출 측정시스템인 「바이엘 기후 체크」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산 공정을 감독하고 있다. 또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도록 염산에서 염소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여 전력소비와 이산화탄소 방출에 있어서 30%의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기능성 의류제조사인 포드 스포츠는 사회 공헌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독일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이다. 포드 스포츠는 1994년부터 「에코로그」 레이블을 도입하여 재활용 이니셔티브를 추진하였다. 독일 중고의류의 대부분이 폴리에스테르 제품으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는 제품인 반면에, 포드 스포츠는 자사 제품 중에서 단추나 지퍼 등 각종 부품 소재를 함께 녹여 100%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재활용하고 있다. 또한 「포드 에코시스템」이라는 포괄적인 친환경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여 생산, 소비, 사용, 폐기에 이르는 전 과정에 적용하고 있으며, 제품에 「에코시스템」이라는 레이블을 붙여 기업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 친환경 경영실천이 윤리경영에 주는 시사점

이산화탄소 배출량 증가가 OECD 1위인 한국의 상황에서 독일의 사례와 같이 친환경적 윤리경영을 성공적으로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상당한 시사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째, 친환경 경영은 「CSR 액션 플랜」과 같이 정부의 주도적인 사회적 책임의 큰 틀 안에 포함시켜 관리할 필요가 있다. 독일 제품의 품질 인증에서 「CSR-Made in Germany」마크를 인증하여 기업이 CSR을 지속성장의 일환으로 관리하고 독려하고 있듯이, 정부주도의 액션플랜은 그동안 기업의 자발적 의사에만 맡겼던 관행과 다르게,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을 국가적 측면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켰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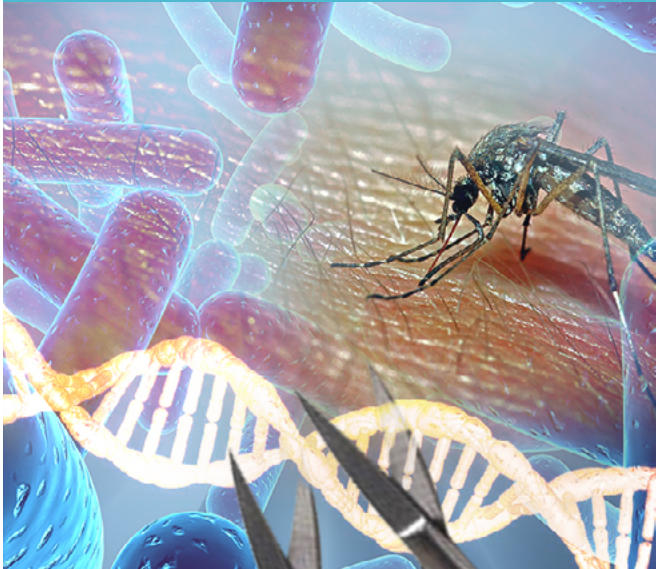
둘째, 자발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경영을 실천하는 민간 기업들은 친환경 기술개발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지속가능 기업의 선도적 위치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바이엘사의 자체적인 「바이엘 기후변화 대응프로그램」은 기업

의 생산성 향상과 친환경 경영의 실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포드 스포츠처럼 사회 공헌과 「에코시스템」이라는 레이블을 붙여 수익과 기업 이미지를 함께 제고하는 경영 수완은 우리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눈여겨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기업 스스로가 21세기의 선도적 기업이 되도록 사회적 책임과 친환경 기술을 함께 접목시키는 경영 원칙은, 독일의 사례를 비추어 볼 때 21세기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 아니라 어쩌면 필수적인 덕목이 될 것으로 보인다.

4차 산업혁명의 4대 윤리문제

보고서
리뷰



지구를 근본적으로 재창조할 수 있다는 과학적 파위가 먼 미래의 일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시대가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정보기술 및 인공지능의 발전은 생물학 및 물리학의 발전과 결합해 깜짝 놀랄 시너지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4차 산업혁명으로 인정받고 있다. 하지만 기술은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4차 산업혁명에서 발생할지 모를 윤리적 및 사회적 영향에 대한 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생명윤리 관련 이슈를 선도하는 연구기관 미국 해스팅스센터(Hastings Center)는 “4차 산업혁명의 4대 윤리문제”를 제기하며 선부른 접근에 경고장을 보내고 있다.

▶ 기술개발이 최우선인가

우리는 자율적으로 개발되는 치명적인 살상무기나 군용로봇의 금지 가능성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는 인간이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치명적인 살상무기가 자체적으로 목표물을 선정하여 파괴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금지령이 곧 제도화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 이런 전망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포함한 기후변화가 문제가 되면서 행성조건을 바꾸는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이것은 집단적인 접근이 필요한 글로벌 이슈이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에는 유리한 기후환경을 만들 수 있지만 다른 나라에는 해로운 기후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기술력만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지 않고

글로벌 차원에서 윤리적인 기준에 따른 판단이 요구되는 지점이라고 할 수 있다.

▶ 기술진화는 어떤 목적에 사용되어야 하나

제4차 산업혁명에서 기술은 인간의 다양한 증강(능력향상)을 제공할 것이다. 기술진화는 질병 제거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고, 운동능력 증대/기억력 증대/공격적 행동 감소 등 우리가 증대하거나 감소시키고 싶은 능력까지 그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가 고민해야 할 지점은 증강에 대한 일반적인 지지나 금지가 아니라 각 사례별로 인간의 변형을 앞당길 수 있는지, 또는 후퇴시킬지 디테일한 접근이 필요하다.

▶ 기술발전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하나

이것은 기술연구가 어떻게 진행되어야하고 세상 속에 어떤 방식으로 개입하느냐의 문제이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는 최근 유전자 드라이브를 사용할 때 사전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획기적인 보고서를 발표했다. 유전자 드라이브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 Cas9)를 통해 특정 야생 동식물의 전체 개체에 특정 유전 요소를 기하급수적으로 퍼뜨릴 수 있는 기술이다. 이 기술은 말라리아와 지카 바이러스처럼 인간에게 질병을 가져오는 매개체인 모기를 박멸시키는 데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진다. 국립아카데미의 보고서는 유전자드라이브 기술개발을 권장하지만 조작된 유기체가 야생상태에 방출되기 전에 실험실이나 소규모 현장 연구에서 신중하게 진행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생명윤리를 다루는 기업이 철저한 검증을 거치지 않고 잘못을 저지를 경우, 생태계 교란이라는 생태환경재앙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생태윤리를 기업 윤리의 제일 덕목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 현장에서 규범준수 여부의 모니터 문제

연구 및 기술 확산에서 고려해야 할 여러 측면의 가이드라인이 있지만 그 준수여부를 모니터하거나 상습적 위반자를 책임 추궁할 능력은 가이드라인에 미치지 못한다. 예컨대, 몇몇 유독성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상식적인 규정이 있지만 규제담당자가 화학물질 현장을 조사·감시하기에는 재정이 매우 불충분한 실정이다. 21세기에 규제당국과 기업의 협력 메커니즘은 필수적인 규제가 필요한 영역과 이를 강제하는 방법을 잘 파악해야 할 것이다.

▶ 4차 산업혁명에서 고려해야 할 핵심가치

4차 산업혁명을 둘러싼 논쟁에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는 안전일 것이다. 즉, 4차 산업혁명에 동참하는 기업은 개인과 사회가 신기술 때문에 해를 입을 가능성을 줄여야 할 의무가 있다. 실제 기존 규제기관의 가장 주된 임무는 안전을 증진하는 일이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기술의 편리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정부-기업 거버넌스는 공정성 원칙을 고려해야 한다. 예컨대 기업이 경제적 부를 가진 소수를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상품화한다면 이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야생지역의 고유한 가치에 대한 존중과 책무의 강조는 4차 산업혁명의 논의과정에서 사라지거나 경제발전에 반대하는 것처럼 비쳐진다. 오히려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인간이 환경의 본질을 변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해 윤리적인 문제제기가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4차 산업 혁명은 우리에게 막대한 힘을 가져다주었다. 하지만 그 힘의 현명한 사용을 위해서는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가 4대 윤리문제를 충분히 모니터링해야 한다. 새로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를 구성해 일자리를 만들고 새로운 경제발전의 계기로 삼으려 한다. 각계 전문가의 참여, 특히 (기업)윤리 전문가의 조언과 협력이 4차 산업혁명 성공의 핵심 열쇠가 될 수도 있는 만큼 위의 4대 이슈를 잘 살펴야 할 것이다.

윤리경영 Step by Step

확산기 1단계 -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윤리경영을 위해 다양한 내용의 교육 프로그램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런데, 임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의미가 있을 텐데 그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교육방법이 있을까요?

윤리교육의 목적은 임직원들로 하여금 윤리적 판단 기준을 의사결정의 기본 원칙으로서 체화시키는데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기업문화로 정착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교육내용은 자사의 윤리규범과 기업철학, 윤리경영의 역사 및 의사결정원칙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모든 임직원이 교육대상입니다.

교육 진행 방법의 종류를 살펴볼까요?

☞ **집합교육**은 많은 사람들에게 간단명료하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윤리경영 초기 시행 시 효과적입니다. 다만, 업무공백의 발생과 피교육생의 토론이나 의사결정기술개발이 미흡하던 것이 단점입니다.

☞ **워크숍**은 Q&A와 쌍방향토론, 조직의 비전, 미션 및 가치의 공감을 통해 적극적이고 다각적인 사고 개발과 문제해결능력을 강화합니다. 그러나 역시 업무공백의 발생과 상대적으로 높은 학습비용이 소요되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지요.

☞ **사이버 및 모바일러닝**은 학습자 주도형 교육으로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장기간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교육의 집중효과가 떨어지고 토론학습 및 실습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 이 외에 토크콘서트, 청렴·윤리 골든벨 등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를 이끌어 내는 이벤트성 행사도 있습니다. 꼭 참여형 이벤트가 아니더라도 역할극(role play)이나 연극, 뮤지컬 관람 등은 어떨까요?

윤리교육 후 피드백 과정도 중요하답니다. 교육이 완료되면 다음 절차를 기억하세요.

- ① 학습자를 대상으로 교육 수료 서명 받기 (윤리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는 기회)
- ② 교육대상자의 교육만족도 측정하고 윤리 담당부서로 통보하기
- ③ 교육효과 측정결과를 윤리경영실천상황 평가결과와 연계하여 윤리실천력 향상 방안 강구하기

타사는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aT)는 윤리주간을 맞아 직원 60여 명과 함께 윤리골든벨을 진행했습니다. 우수한 팀에겐 푸짐한 상금이 주어졌다고 해요!

아무리 훌륭한 윤리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임직원들의 인식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다음 Step에서는 임직원들의 윤리인식 공유 및 동참을 유도하는 효과적인 홍보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동향

1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와 강원도 사회갈등조정위원회는 제15차 아시아옴부즈만협회 총회 및 2017 평창 글로벌 옴부즈만 컨퍼런스를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는 아시아옴부즈만 협회 및 세계옴부즈만협회 아시아지역 회원기관 등 80여 명의 회원기관 대표단과 국내 옴부즈만, 학계 등 총 400여 명이 참가했다. 성영훈 권익위 위원장은 "옴부즈만은 불편·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해 침해받은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 국민권익 보호의 보루"라며 옴부즈만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참고: <http://www.focus.kr/view.php?key=2017051500135335282>

2 한국노바티스에 리베이트 투아웃제 적용, 건강보험 급여 정지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시행 이후 처음으로 한국노바티스에게 6개월 건강보험급여 정지 및 559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K대 병원 의료인 등에게 약 26억 원의 금액을 지속적으로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바티스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영업성과 평가제도 개편, 준법감시 기능 강화 등 윤리경영을 위한 조치를 했으며, 앞으로도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302000198>

3 공정위 "다우-듀폰 합병 독과점 우려" 자산매각 명령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5년 합병한 글로벌 화학업체인 듀폰과 다우에 대해 자산매각을 명령했다. 듀폰과 다우는 '산(酸) 공중합체'분야에서 세계시장 점유율 1위와 3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들의 합병이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4월 9일, 두 업체에 대해 "산 공중합체의 개발, 생산·판매와 관련 결합 당사회사 중 한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기업결합 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매각하라"고 밝혔다. 또 매각이 완료될 때까지 산 공중합체 관련 자산을 분리해 각자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도 덧붙였다.

참고: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70407000596>

국내행사

제3회 빛가람 청렴문화제 개최

주최: 광주·전남 혁신도시 14개 공공기관 공동
일시: 2017년 6월 19~23일
장소: 전라남도 나주, 한국전력공사 본사

비즈니스 연속성 경영시스템(ISO22301)

선임심사원 양성과정

주최: BSI
일시: 2017년 6월 20~24일
장소: 서울, BSI Training Center

해외동향

1 인니, '원유유출' 태국 국영석유사에 "2조 3000억 원 물어내라" 소송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유유출 사고를 일으킨 태국 국영석유사를 상대로 2조 30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태국 국영석유회사 PTT는 티모르해 원유유출 사고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가난한 곳 중 하나인 이 지역 주민들의 생계에 심각한 타격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을 부인해 왔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5/06/0619000000AKR20170506026100104.HTML>

2 美법무부, 우버 '불법 영업 프로그램' 범죄혐의 조사 착수



세계 최대 차량공유업체 우버가 불법영업 단속을 피하려고 개발·이용한 비밀 소프트웨어에 대해 미국 법무부의 조사를 받게 됐다. 문제가 된 것은 '그레이볼'(Greyball)이라는 소프트웨어로, 우버가 승인을 받지 못한 지역에서 합정수사를 하는 교통 당국 단속 담당자를 식별해 탑승을 제한하는 기능을 갖췄다. 경찰관이 우버 차량을 호출하면 처음에는 예상 요금과 함께 탑승 가능한 차량이 이동하는 것처럼 보였다가 곧바로 '취소' 메시지가 뜨는 식이다. 우버 운전자들은 이 프로그램을 2014년부터 사용했으며, 우버 법률팀도 이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5/05/0619000000AKR20170505057900009.HTML>

3 "생명 구하는 AI" 페이스북, 인공지능 기술로 자살 막는다

페이스북이 인공지능(AI) 기술을 동원해 이용자 자살 방지에 나섰다. 최근 개인 생방송 서비스인 '페이스북 라이브' 이용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연달아 발생하자 AI 기술을 이용한 자살 방지에 나선 것이다. 블로그를 통해 시가 이용자 게시물 내용에서 자해 또는 자살 징후를 파악하고, 라이브 방송에서 자살 의심 행동이 보이면 시청자들이 손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든 것이다. 이 같은 기능은 우선 미국 전역에서 시험 운영할 예정이다.

참고: <http://www.yonhapnews.co.kr/international/2017/03/03/0608000000AKR20170303086000009.HTML>

해외행사

Sustainable Development & Planning 2017 지속 개발 및 계획 설계 컨퍼런스

주최: Wessex Institute
일시: 2017년 6월 27~29일
장소: Bristol, UK

Procurement Anti-Corruption Training 반부패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주최: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Academy
일시: 2017년 7월 17일~8월 18일
장소: Laxenburg, Austria

청탁금지법 QnA

<사례소개>

Case 1. 추억으로 만드는 스승의 날

지난 5월 15일은 청탁금지법의 시행 이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스승의 날이었다. 관례적으로 학생이나 학부모가 선생님께 선물을 건네던 날만큼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지만, 이에 대비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미리 청탁금지법에 위배되지 않는 구체적인 기준을 밝혔다. 기존과 같은 많은 꽃과 선물이 사라져 아쉬움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었지만, 사라진 꽃과 선물의 자리에 마음과 추억을 담기 위한 움직임이 이번 스승의 날부터 시작되었다.

T사에서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 또는 교사를 대상으로 학급에서 있었던 추억을 공모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이 중 선정된 60개 학급에는 카네이션 꽃바구니와 간식 등 응원의 선물이 전달되었고, 선정되지 못한 학급에는 간식과 감사편지를 전달하여 스승의 날을 기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Case 2. 식사 쫓이야?

공연기획사 대표 A는 공연을 앞두고 공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 두 명과 식사를 하게 되었다. 식사 값은 1인당 5만 원 가량이었고, 그 자리는 A씨가 계산하였다.

▶ 재판부는 규정 이상의 식사를 접대 받은 공직자 두 명에게 각각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들이 수수한 식사 값의 2배였다. 반면 그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A에겐 2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다. 공직자들과 마찬가지로 2배의 과태료이긴 하나, 두 사람에게 각각 5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두 명의 공직자와 A씨 뿐만 아니라 A씨의 회사도 양벌규정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금액은 A씨와 같은 20만 원이었다.

동자에게 물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윤리적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U 유통업체 O 대리

4차 혁명의 시대라고 하여도 정직함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어떤 시대건 기업이 소비자를 속이지 않고 올바르게 일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라 생각합니다.

P 생산업체 Y 주임

사실 아직도 4차 혁명에 대해 모호하게 느끼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윤리경영을 실천하려면 회사가 직원들이나 고객들과 자주 소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많은 대화를 나누다보면 그 시대의 고객이나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맞추보세요

다음 중 각 산업혁명과 기업이 짝지어지게 된 윤리적 리스크가 옳게 연결된 것은?

- | | |
|---------------------------|------------------------|
| ① 1차 산업혁명 - SNS시대의 소비자 | ② 2차 산업혁명 - 인간의 부품화 |
| ③ 3차 산업혁명 - 대기업에 대한 책임 증대 | ④ 4차 산업혁명 - 도시화로 인한 문제 |

정답 제출처: 국민권익위원회 민간협력담당관실 aypark@korea.kr

성함, 주소(상품권 수령지), 연락처를 보내주세요.(22일까지)

정답을 보내주신 분 중 5명을 추첨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지난 호 정답: 4번 지난 호 정답자는 조진혁님, 조미나님, 유광열님, 강동원님, 남상호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